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전망과 극복방안 연구: 향토예비군 운용 개선을 중심으로

김연준*

요 약

우리는 전쟁에서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전쟁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로 승리한 사례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4세대전쟁 이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열세한 국력임에도 한반도 무력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국제사회와 남한을 상대로 다양한 정치·사회·군사적 수준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DMZ 도발 등을 자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제4세대전쟁 차원의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과 도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인 향토예비군제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개선된 향토예비군제도를 통해 한반도에 세력균형 변화와 힘의 전환점으로 이행을 단호 거부할 수 있다. 즉 예상되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하여, 우리의 향토예비군제도는 우리의 단호한 전쟁 수행을 위한 의지(意志)이자, 정치·사회·경제·군사적인 수단이며, 최적의 대안으로 기능발휘가 가능하다.

A study on overcoming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fourth-generation war threats : Focusing on the Homeland Defense Reservists

Kim Yeon Jun*

ABSTRACT

We take it for granted that strong sides defeat weaker counterparts, while predicting the outcome of the battles. But in modern war, we can find plenty of evidence that weak sides won against the strong. This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logically by the fourth-generation war theory. the North Korean does not give up its unification strategy, which is unification by force, even though its inferior power. It is continuing various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levels of provocations toward bo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 Recently, North Korea did nuclear test, launched ICBM test, provoked the DMZ, and expecting to continue the provocations of the fourth-generation war level. We hav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North Korea's fourth-generation war threats and provocations that it is focusing on. Based on this,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the Homeland Defense Reservists as fundamental measures as the fourth-generation war threat and supplement related systems. We can firmly refuse the balance of power and power shift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mproved Homeland Defense Reservists. As the expected North Korea's the fourth-generation war threats, our Homeland Defense Reservists is a firm will of conduct war, and political-social-economic-military means, it is possible to display as the best alternative.

Key words : The fourth-Generation War, power shift, Homeland Defense Reservists

접수일(2016년 9월 2일), 수정일(1차: 2016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2016년 10월 26일)

*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1. 서 론

제4세대전쟁 이론은 약한 者라도 강한 者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3대 세습에 따른 정권의 불안정, 외교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북한은 국력과 군사력에서 대한민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국지도발, 사이버전 등 다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특히나 김정은 체제는 최근 들어 다양한 국지도발과 병행하여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통해 핵도발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제 북한은 핵무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더 이상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문제로 국내·외로부터 심각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를 부연하면,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중이 주한미군을 방호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지역에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생존의 문제인 ‘사드’배치문제가 대외적으로 한국-중국·러시아간에 외교적 마찰과, 대내적으로 국론분열을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드’ 논쟁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가 미군에게 ‘사드’배치를 허용해주면, 북한의 또 다른 모든 유형의 도발(국지도발, 화력도발, 사이버전 등)들은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없는가? 다음으로, 미국이 보유한 무기체계인 ‘사드’를 그들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거나 혹은 우리가 구입하여 배치한다면 북한의 도발위협을 영원히 거부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자국의 안보를 전적(全的)으로 외부세력에 맡긴다면 우리의 안전은 절대 보장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도발이 가시화되는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전쟁양상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 틀인 제4세대 전쟁이론을 검토하고, 제4세대 전쟁의 사례분석을 통해 한반도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어서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사회·경제·군사적 여건 하에서 북한의 제4세대 전쟁위협과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우리 향토예비군 제도의 개선방향과 가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제4세대 전쟁 이론 검토

2.1 제4세대 전쟁의 개념

윌리엄 린드(William S. Lind)는 현대의 전쟁양상을 ‘제4세대전쟁(the fourth generation war)’이라고 특정하면서, ‘제4세대 전쟁’은 以前의 전쟁형태들(인력전, 화력전, 기동전)과는 상이한 형태의 전쟁이며, 제4세대 전쟁은 1648년 이후 시작된 현대전의 4번째 전쟁양상으로 기존의 전쟁방식인 인력전, 화력전과 기동전 등과는 상이(相異)한 전쟁방식으로 진행되는 최근의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10].

한편 토마스 햄즈(Thomas X. Hammes)는 위 린드의 제4세대 전쟁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전쟁양상의 변화는 2차 세계대전 후 정치·경제·사회·기술 분야의 변화와 함께 제4세대 전쟁으로 진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5]. 따라서 현재의 제4세대전쟁은 상대방의 (군대의 격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전쟁수행의지를 직접 파괴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햄즈는 제4세대 전쟁을 정치적 의지의 우세가 적절히 사용된다면 거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상대방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또는 예상되는 이익에 비해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정치·경제·사회·군사적)를 사용하는 전쟁이라고 정의하였다[5].

이상과 같이 제4세대 전쟁은 상대적으로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전쟁으로 (적의 군대를 패배시킴으로써 단기간에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기술·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강자의 정치적 의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 승리를 추구 하는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진화된 형태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2.2 제4세대전쟁의 특징

2.2.1 전쟁 목표와 수단 면

제4세대 전쟁의 목표는 상대 정책결정자들의 전쟁수행 의지를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以前의 전쟁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능력인 군사력을 타격함으로써 이러한 결과 전쟁수행 의지를 간접적으

로 무력화시키려 하였다. 즉 제4세대 전쟁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전쟁수행 의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이를 변화시킴으로써 물리적인 군사력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4세대 전쟁의 목표는 상대방 국민 혹은 정책수행자의 정치·사회적 마비와 심리적 붕괴를 유도해 정치적 승리를 달성하려는 정치전쟁으로 볼 수 있다.

제4세대 전쟁의 수단은 상대방의 전쟁수행 의지를 마비시키기 위해 군사적 수단에 더하여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사용한다[5].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는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조직을 활용하며, 초국가적인 조직은 국가통제 외부에 있어 활용하기가 용이하며, 국가하위 조직으로는 정당조직, 종교집단 등 다양한 이익단체 등을 활용하여 그들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정보기술 발달로 형성된 인터넷을 이용한 언론은 최소 비용을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2.2.2 전쟁양상 면

제4세대 전쟁양상은 이전세대의 전쟁양상을 포함하고 있다. 제4세대 전쟁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의 우위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최종목표인 상대방의 완전한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재래식 군대에 의한 전면전 형태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5]. 제4세대 전쟁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정치·경제·사회·군사적 영역 전체를 통해 발생할 것이다. 국제무역 혹은 금융시스템 등 국가기반 시설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공격하여 상대국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자원을 감소시켜 약하게 만드는 행위 등으로 들 수 있다[5].

제4세대 전쟁은 장기전의 양상을 보인다. 제4세대 전쟁은 전투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간에 속전속결을 할 수 없다. 상대방보다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기전을 추구하는 것은 자멸(自滅)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어 상대적 우세가 되는 시점에서 최종 목표를 공략하기 때문에 장기전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4세대 전쟁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군사적·비군사적인 모든 수단을 활용하며 약자의 입장에서 힘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의 양상

으로 진행될 것이다.

2.2.3 전쟁수행 주체 면

제4세대 전쟁이론의 창시자인 린드는 전쟁의 수행 주체를 국가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non-nation actor)로 규정하였다[4]. 알카에다, 하마스, 헤즈블라 등과 같은 비국가단체들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햄즈는 제4세대 전쟁 수행 주체를 분란자로 한정하기 않았다. 그는 미국에 위협을 주는 적들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린드의 주장과 같이 비국가 행위자인 '초국가적 조직형태를 띤 분란자'이다. 이런 유형의 적은 미국 내에서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최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미국의 생존과 선도적 위치에 도전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두 번째 유형으로 미국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맹 네트워크와 제4세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유형이 오히려 미국에 더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그 중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분석하였다[5].

2.3 제4세대전쟁의 시사점

전쟁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능력(能力)과 의지(意志)로 구성된다. 강자는 군사적인 능력이 우월하며 그 의지가 충만하다. 반면에 약자는 강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자가 약자에 비하여 모든 것이 우세하다면 전쟁의 결과는 시작하기도 전에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승리한 전쟁은 현대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제4세대 전쟁의 특징은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 제4세대 전쟁의 특징

구분	기존 전쟁	제4세대 전쟁
목표	先 적 군사력(능력) 파괴	先 적의지 자체 마비
수단	군사적 수단	군사적+비군사적 수단
전쟁 양상	정규전 위주	비정규전+정규전 배합
주체	국가	국가+비국가 행위자

이상과 같이, 제4세대 전쟁은 상대적으로 弱者가 수행하는 전쟁수행 형태로써 장기간에 걸쳐 가용한 모든 수단(정치, 경제, 사회, 군사, 기술 등)을 이용하여, 强者의 정치적 의지에 직접적 타격을 가해 승리를 추구하는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진화된 형태의 정치전으로 정의된다. 또한, 전쟁 전 단계를 조망해 볼 때 상대적 약자는 제4세대 전쟁을 통해서 강자의 결속력과 의지, 심리 등을 약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우세한 입장을 조성한 후에, ‘힘의 전환점’에서는 재래식 군대에 의한 전면전을 통해 최종목표인 적대국의 완전한 붕괴를 유도 하려는 것이다.

3. 제4세대전쟁 사례, 북한 위협 전망

3.1 외국의 제4세대전쟁 사례

한중 규모에 불과한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은 거대한 규모의 장개석 국민당 군대를 격퇴하고 중원을 통일하였다. 또한 절대 열세하였던 호치민의 북베트남 군대는 당시 세계최강의 군대인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남베트남을 상대로 승리한 사례는 弱者가 强者에게 승리한 제4세대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3.1.1 마오쩌둥의 중국 혁명전쟁(국공내전)

햄즈(Thomas X. Hammes)는 마오쩌둥을 제4세대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전자로 평가하면서 제4세대 전쟁의 기원은 국공내전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5]. 마오쩌둥은 1~2단계에서는 정치적 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차원 정치적 투쟁단계로 정치·사회·경제력을 구축하고 세력균형을 변화시켜 재래식 군대로 상대를 최종적으로 격파할 준비가 완료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상대적 힘의 전환점에서 최종 목표인 국민당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재래식 군대에 의한 전면전을 수행하였다[1].

각 단계의 전쟁 목표와 수단, 전쟁양상 등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상대적 약자인 중국공산당은 국민당 군대의 힘의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¹⁾ 정치적 힘을 구축하고 조직화하기

위해 인민전쟁전략을 수행하였다. 내전에 있어서 약자가 강자와의 비대칭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와 수단은 민심(popularity)을 획득하여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마오쩌둥은 농업 사회이던 당시 중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국내 그들의 해방구에서 토지무상분배를 통해 민심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자분가와 민족자산가 계급을 혁명세력에 규합하여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대내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국제적으로 선전전을 통해 장개석과 후원세력들의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켜 나갔다.

2단계에서는 유격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유격전을 통해 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단순한 무력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전환하였다[9]. 유격대는 결전을 통한 군사적 승리보다는 치고 빠지기, 숨고 탐색하기, 매복과 같은 전술로 정부군의 전투의지를 분쇄했고, 결전을 통한 상대방 군사력의 무력화 혹은 영토 확보 등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소모전 형식의 지구전을 수행함으로써 정부군을 지치게 만들고 주민을 동원하는 정치·사회적 수준에서 전쟁을 추구하였다.

3단계는 1~2단계를 거쳐 세력균형이 공산당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재래식 전쟁으로 결전을 치루는 단계이다[9]. 마오쩌둥은 혁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군사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국민당 정부가 위치한 지역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 그리고 가장 약한 적부터 차례로 격파하는 전략을 수행하였다.

마오쩌둥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는 국민당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치체계를 탄생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정치·사회적 수준에서 인민전쟁전략을 구사하여 정치적 우세달성에 집중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민당 군대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오쩌둥이 수행한 혁명전쟁 3단계 전략은 1~2단계의 전쟁방식은 제4세대전쟁이며, 이후 시행한 3단계는 제3세대 이전의 전쟁방식이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총 16만 정, 야포 6천문 보유하였음. 반면 국민당 당원은 430여만 명에 병력 370만 명, 소총 16만 정, 야포 6백문을 보유하여,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에 비하여 당원과 군사력에서 절대 열세였음.

1) 1945년 중국공산당의 당원은 120여만 명에 병력 32만 명,

3.1.2 호치민의 베트남 통일전쟁

호치민의 베트남 통일전쟁은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들을 상대로 약자인 북베트남이 베트남 통일과 공산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오쩌둥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호치민은 폭력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주민의 지지를 쟁취하는 비폭력 단계를 더욱 중요시 하였다[5]. 호치민은 마오쩌둥의 혁명전략 3단계에서 제시된 정치적 조직화 단계와 유격전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5단계 혁명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5].

정치적 조직화 단계를 세분화하여 1단계에서는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조장하여 확산시킨 후, 2단계에서는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반정부 정당을 조직하여 테러, 파업과 폭동을 유발한다.

3단계에서는 유격전을 개시하고 4단계에서는 해방구를 창설한 후 혁명정부를 구성하여 상대방의 정규군을 구축하여 해방구 지역인 상대방 정부 통치지역까지 세력범위를 확장한다.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군사적 공세로 전환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단계이다. 이상과 같이 1~4단계까지가 정치우세를 달성하여 재래식 군대에 의한 전면전 여건을 조성하는 제4세대 전쟁이며, 5단계는 재래식 군대에 의한 군사전쟁이다.

특히나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본격화된 1964년 통킹만 사건 이후²⁾, 북베트남은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위해 정치심리전을 전개하였다.

베트남은 미국 내 반전여론이 형성되어 가는 기류를 인식하고, 1969년의 미국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략적으로 1968년에 구정공세를 통해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라는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미국 내 매스컴을 활용하여 반전여론을 확산시켜 세력균형의 변화를 도모하였다[6]. 한편 구정공세가 북베트남과 베트남의 군사적 패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매스컴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도하였기 때문에 미국사회에서 반전여론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미군

철수로 이어졌다.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미국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총4회(1965년 최초 정규군 투입이후, 1968년 구정공세, 1972년 춘계공세, 1974년 총공세 등)에 걸쳐 5단계 전략을 수행하였다. 호치민은 1974년 총공세로 남베트남을 붕괴시키기까지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적 중심에 대한 국내·외의 선전활동과 장기적인 소모전을 통해 제4세대 전쟁을 선행하여 힘의 변화를 달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재래식 전쟁을 통해 5단계 전략을 성공할 수 있었다.

호치민은 마오쩌둥과 달리 강력한 외국의 군대를 패배시켜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서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미군을 우선적으로 패배시켜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호치민은 4세대 전쟁을 수행하면서 세력균형 변화를 위해 그 중심(重心)을 미국 국민의 전쟁지지로 보았으며, 구정공세에서 전술적 패배를 전략적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여 정치적 수준에서 남베트남 주민과 동맹세력과 전쟁수행 의지를 마비시키는 제4세대 전쟁의 목적을 구현하였다.

3.2 북한의 사례

북한은 1945년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 제4세대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북한의 제4세대 전쟁사례를 ① 해방정국~6·26전쟁, ② 6·26전쟁 이후~현재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3.2.1 해방정국~6·25전쟁 시 제4세대전쟁

김일성은 해방과 동시에 남한지역에 미군인 진주함에 따라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혁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일성은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였다[2]. 해방 이후 6·25전쟁 이전까지 북한이 수행한 전략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부터 1946년 초까지는 해방 직후 정치적 공백기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정치투쟁을 시도하였던 시기이다. 이 기간 중 남한지역에서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이 정치활동을 시도하였으나, 조선정판사 위폐사건(1945년 10월)으로 인해 좌익세력에 대한 검거가 시작되면서 지하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둘째, 1946년부터 1947년은 남로당이 합법과 비합

2) 미국은 소련의 세력팽창 저지를 명분으로 베트남전쟁을 수행하였음. 1964년 미군은 통킹만에서 일어난 북베트남 어뢰정과 미군 구축함간의 해상전투(일명 '통킹만 사건')를 계기로 전격적으로 참전하였음.

법적인 투쟁을 병행하여 남한사회의 교란공작을 자행하던 시기이다. 1946년 9월 총파업, 같은해 10월 대구 폭동사건 등을 유도하였으며 합법적인 투쟁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포섭³⁾ 등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1948년부터 6·25전쟁 발발 전까지는 북한이 극단적이 무장폭력투쟁을 전개했던 시기이다. 북한은 위 기간 중 무장공비를 10차에 걸쳐 2,400명을 남파하여 남로당의 유격전 활동과 연계하여 남한사회 내부에 살인과 방화 등을 자행하였다. 또한 38선 접경 지역에서 자행한 불법침공과 교전횟수는 874회에 달하였다[7]. 이외에도 경찰서와 지서 습격사건, 국회의원과 같은 요인 암살사건 등 다양한 무장폭력 투쟁과 게릴라 투쟁을 전개하여 한국정부의 전복과 적화통일 여건조성에 주력하였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통합하여 남한사회의 전쟁수행 의지와 능력 말살에 매진하였다. 정치적으로 정부의 전쟁지도부가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하여 오판하도록 유도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선전과 선동을 통해 남한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증폭하였고, 군사적으로 38선 접경지역에 국지도발과 게릴라 활동을 통해 한국군을 심리적·물리적으로 치지도록 하였으며, 한반도에 주둔한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하여 남한지역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은 1949년 4월 미군 사고문단 500명만 잔류하게 유도하였다. 또한 북한은 6·25당시에 남한에 비하여 국력이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쟁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전을 지속하였다. 남로당과 연계하여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사건 등 후방지역에 대한 게릴라 활동을 지속하여, 남한 군사력의 분산과 사회혼란을 조성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퇴각하던 북한군은 지리산 등으로 들어가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3.2.2 6·25전쟁 以後~현재까지 4세대전쟁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무려 3,040회의 침투 및 국지도발을 감행하였다[8].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당면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대별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그들 고유의 방식으로 4세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의 실태를 주요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3년 휴전협정 이후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전후 복구사업에 주력하면서 표면적으로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면서 북한사회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된 1960년대부터 보다 공격적·적극적인 4세대 전쟁을 수행하면서, 1964년에는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을 내세워 대남혁명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1968. 1), KAL여객기 납치(1969. 9) 등 무력도발의 강화하였다. 북한은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도 남북자유왕래 제의(1968. 9)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제의(1969. 9) 등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위장 평화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둘째, 1970년대에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회담 등의 다양한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도 닉슨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베트남의 패망 등 국제혁명역량이 강화되자 대통령저격(1974. 7), 판문점 도끼만행(1976. 8) 등 강경노선을 통해 남한사회의 혼란을 부추겼다.

셋째, 1980년대 북한의 종래의 4세대 전쟁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장소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테러수단을 이용하였다. 북한은 아웅산 테러(1983. 10), 대한항공 858기 폭파(1987. 11)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 혁명역량 강화에 부심하였다.

넷째, 1990년대 북한은 동서냉전체제 와해라는 격변기에 지도자 교체, 내부 경제난, 국제적 고립 심화 등 3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우세한 상대인 남한과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고, 통일전선 전술과 남한내 지하당 등을 통해 정치 우세 달성에 주력하면서 자체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우리보다 군사력에 절대열세인 상황에서 남북경협·대북 경제지원 등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5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감행하였다. 또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해상공격을 벌인 연평해전(2002), 쌀·시멘트 등 대북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 재개되던 중 발발한 천안함 폭침(2010),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자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2010) 등을 통해 자체혁명

3) 남로당의 박헌영은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되자 국회의원을 포섭하여 외국군 철수 안을 상정하도록 하였으나,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종결되었음.

역량 강화를 이루면서, 미국의 한반도 지원 역량 약화에 주력하였다.

3.3 한반도에서 시사점

마오쩌둥과 호치민은 국공내전과 베트남전에서 상대방의 완전 전복을 목표로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제4세대 전쟁을 수행하였다.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은 국공내전에서 외세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가운데 군사력이 열세한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 확보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고, 군사력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국민당 군대보다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전면전은 철저히 회피하였으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뒤에는 과감하게 전면전을 수행하여 중국대륙의 통일을 달성하였다.

호치민의 북베트남은 베트남전에서 세계최강의 군대인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남베트남과 전쟁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북베트남 정부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남베트남 사회의 분열과 패배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호치민은 미군의 철수를 목표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4세대 전쟁을 지속하여 미국 국민의 반전여론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남베트남에서 미군을 포함한 동맹국의 철수를 강요하였다.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미군과 동맹국들이 철수한 힘의 전환점에서 전면전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였다.

북한의 대남 정치적 최종목표는 중국공산당과 북베트남과 같이 한국정부의 완전한 전복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현하는 것이다[3]. 북한은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남한을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무력혁명(전쟁)으로 해방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제4세대 전쟁을 지속하여 왔다. 북한의 제4세대 전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력균형의 변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해 왔다.

첫째, 6·25전쟁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우세하던 시기였다. 이시기에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 남한의 전쟁수행 의지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결정적 시점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동서냉전체제가 해체되던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외교적 고립,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김정은 체제로 전환에 따른 불안정성 등으로 흡수통일의 우려가 심화되던 시기였다. 이시기에 북한은 남한과 경제협력과 교류활성화에 주력하면서 북한체제의 존속과 남남갈등의 증폭에 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국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차원의 핵위협을 노골화 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제4세대 전쟁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의 5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 발사시험 등을 통해 북한의 독자적인 핵무기의 전력화가 가능한 수준임을 과시하고 있다. 더하여 북한은 소니사 해킹시도(2014. 11), DMZ 지뢰도발(2015. 8) 등을 통해 다양한 비대칭 전력의 도발을 가속화 하였다. 북한은 향후로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미사일 발사시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특수부대와 수중전 등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국지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러한 정치·군사적수준의 도발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세력균형 필요성과 의지를 무력화 하여 남남갈등을 심화시키고 힘의 전환을 강요하며, 이후 전면전을 통해 한반도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시행중인 이러한 제4세대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기조 하에서 한국 정부·국민·군대 등이 삼위일체(trinity)가되어 확고한 안보의지와 실효적인 대응책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생이 가능한 힘의 전환점으로 이행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다.

4. 향토예비군 운용체계 개선방안

지난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창설된 우리의 향토예비군은 국민의 단합된 안보의지의 표상이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수단으로 그 임무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창설된 이후 환경요인의 변화는 향토예비군

제도의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예비군제도 창설당시와는 다른 변화요인(부대개편계획, 산업화, 지방자치제도 시행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4세대 전쟁 위협에 대비한 향토예비군제도의 가치와 임무를 재조명하고, 운용개념의 전반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4.1 향토예비군제도 가치·임무 재조명

먼저 우리 향토예비군 제도의 가치를 살펴보려 한다. 국가가 자체 역량으로 군사력을 건설하는 방법은 현존 전력(현역)에 의하거나, 예비전력(예비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대의 대다수 주권국가들은 안보여건을 고려하여 현존전력과 예비전력을 병용(並用)하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건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대의 주권국가가 예비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현대전의 특징인 총력전 체제에 부응하면서도,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력 건설·운용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안보의 딜레마’⁴⁾를 극복하고, 대내적으로 ‘국방의 딜레마’⁵⁾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표 4-1> 남·북한 군사력 현황[8]

구 분(계, 만명)	예비군	현역
한 국(373)	310	63
북 한(890)	770	120
비 고(1:2.4)	1 : 2.5	1 : 1.9

위 <표 4-1>과 같이, 한국군은 현역 63만여 명과 향토예비군 310만여 명을 포함하여 370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군은 현역 120만여 명과 현역과 유사한 수준의 예비병력 770만여 명을 포함하여 도합 890만여 명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軍)의 병력규모는 북한군에 비해 약 42%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310만여 명의 향토예비군은 병력규모면에서 북한군사력에 대한 절대적인 열세를 상쇄하고, 국가적으로 후방지역 안정을 유지하면서 전쟁

지속능력을 보장하는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향토예비군 제도는 최근 북한의 핵위협과 육상·해상 등 제래식 도발 등 다양한 군사위협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토를 사수하겠다는 전 국민의 단합된 안보의지의 구현이면서, 군사적 위협 발생 시 전쟁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운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즉 우리는 향토예비군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대내·외적인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하여 정치적·사회적·군사적·경제적 수준에서 효과적인 대비와 대응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토예비군은 향방동원을 통해 전·평시 향토방위 작전과 전시 현역부대의 증편을 보장하고 있다. 향토방위작전은 우리의 후방지역에서 실시하는 데, 작전의 지휘는 지역에 소재한 현역부대가 통제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적인 위협을 조치하는 것이다. 또한 전시에는 평시에는 감소 편성되어 운용하는 현역부대에 필요한 전투원을 충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의 향토예비군이 수행하는 작전대상은 1차적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인 특수부대 20만여 명이다.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은 육상·해상·공중 등 다양한 침투 경로로 후방지역의 사회적·군사적 혼란을 조성하여 북한의 의도대로 단기속결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우리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후방지역에 대한 적 특수전부대 침투와 다양한 화력도발에 대응하여 전쟁수행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대응 군사력의 약화를 거부하면서 전면전으로 이행을 억제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 북한의 제4세대 전쟁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향토예비군제도는 평시부터 한국 정부·국민·군대가 삼위일체로 형성되어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으로 그 존재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중차대한 가치와 임무를 수행하는 향토예비군은 창설된 이후로 현역부대개편, 산업화, 지방자치제도 시행 등 변화된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방안의 전반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4.2 향방동원의 실효성 보완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제5조(동원)’을 법적인

4) ‘안보의 딜레마’란 군사력을 건설함에 따라 인접국가와 군비경쟁을 유발함을 의미함.
 5) ‘국방의 딜레마’란 군사력을 건설함에 따라 국가재원을 다른 분야(경제, 사회, 문화 등)에 투자하는데 제한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함.

거로 하여, 현역부대가 민간인 신분인 예비군대원을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군사작전에 운용하기 위해서 향방동원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후방지역작전을 위한 향방동원은 현역부대가 지역 내 가용한 자산 중에서 오직 예비군대원만을 운용해야 한다. 즉 작전지역내 모든 작전 요소인 주민·행정관서·군부대·경찰과 제반 사회안전망(CCTV, 경비업체 등)을 통합한 효과적인 후방지역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후방지역작전은 장기화되고, 사회적 불안과 불만은 가중되어 제4세대 전쟁을 수행하려는 북한의 위협 혹은 도발에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軍)이 북한의 제4세대 전쟁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향방동원은 ‘통합방위법(법률제12844호, 이하 ‘통방법’)'에 근거한 통합방위사태 하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위 ‘통방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규정에 따라, 시·군·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으로써 통합방위사태의 발령과 해제를 심의하고, 군부대지휘관의 조력을 받아 지역 내 모든 작전요소를 통합한 후방지역작전의 준비·실시·해제·복원 등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軍이 북한의 위협 혹은 도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군부대의 향방동원은 위 ‘통방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협의회의에서 선포한 통합방위사태 하에서 시행될 때 모든 작전요소를 포함한 완전작전의 준비·실시 등이 가능하며, 향방동원이 해제된 이후에도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주관 하에 작전피해 복구 혹은 보상 등이 이루어 져야한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향방동원이 시행되고 해제될 경우, 우리의 향토예비군부대는 북한의 제4세대 전쟁 위협과 도발을 단호히 극복하고 전쟁억제를 위한 경제적·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발휘가 가능하다.

4.3 향토예비군 조직편성 개선

향토예비군 조직은 편성되는 대원의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국가행정체계에 따라 편성하고 있다. 예비군이 창설되던 1970년대 당시에 국가행정체계 기본단위는 읍·면·동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향토예비군 조직은 현재까지도 읍·면·동 단위로 편성되어 운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현재 국가행정의 기본단위는 시·군·구 단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우리 향토예비군 조직도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연계하여 시·군·구 위주로 조직 개편과 운용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예비군중대는 읍·면·동 단위로 거주하는 인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중대 규모를 준용하여 1개 예비군중대를 170명 수준으로 표준화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발달된 도로망과 보편화된 이동수단(자가 차량 보유, 공공 교통수단 확충 등) 등은 인접한 지역으로 소집과 작전에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군·구에 편성되는 ‘예비군지역대 본부’는 현역의 대대급부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된 지역통합방위본부를 상호 연결하는 예비군조직으로 후방지역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조직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예하의 ‘예비군중대’는 현역중대 편성 규모를 준용하여 표준화하여 편성하고, (읍·면·동의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중대본부의 최기지역에 거주하는 자원으로 편성하여, 시·군·구 지역범위에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장기작전에 대한 준비와 현역부대와 통합된 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토예비군 조직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4.4 향토예비군 훈련, 편성장비 보완

우리의 향토예비군이 일단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해서 실질적인 예비군 훈련이 되어야 하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재 후방지역을 방호하기 위한 향방작계훈련은 매년 8시간을 전·후반기로 각 4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면서 주특기훈련을 실시 못하고, 일률적으로 투입지역에 대한 지형숙달 혹은 개인화기 사격술 등 병기본 훈련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향방작계훈련에 참석이 개인 일정을 고려하고, 낮은 수준의 보상비 등 정책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 우리의 예비군이 훈련에 참가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비는 식사비와 교통비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

과 이스라엘의 경우, 훈련에 입소한 예비군은 사회소득 수준의 보상을 지급받고 있다.⁶⁾ 이와 같이 예비군훈련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함으로써 자발적인 훈련참여를 보장하고, 훈련당일에 불가피한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함으로써 직책에 부합된 훈련과 숙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장비를 사용가능한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일례로 예비군용 개인화기는 현역부대에서 도태되거나 노후한 장비를 밀어내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예비군대원들이 현역 시절에 사용하던 개인화기는 K-2소총으로,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칼빈소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작전수행을 위한 기본 장비인 개인 방독면의 보유수준은 소요량에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예비군용 칼빈소총과 방독면 부족 등은 예비군물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방치는 국가안보차원의 문제이다. 즉 국가안보는 자력으로 지키려는 국가적 의지와 실천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보상비 현실화, 예비군 기본화기를 최소한 M16소총으로 전력화를 포함한 편성 장비의 교체 등의 사항을 국가안보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즉 예비군조직이 우리 정부·국민·군대가 삼위일체가 되어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 다양한 재래식 도발 등 제4세대 전쟁위협과 도발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현실화 돼야 한다.

5. 결 론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남한보다 국력이 절대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위협을 노골화 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제4세대 전쟁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DMZ 지뢰도발, 제5차 핵실험과, ICBM과 SLBM 발사 시험 등의 다양한 도발을 자행하였다. 앞으로도 북한은 정치·사회·군사적수준의 도발을 지속하여, 한반

도문제에 대한 관련국가간에 세력균형의 필요성을 포기하게 하고, 한국 정부·국민·군대의 전쟁수행 의지를 무력화하여 힘의 전환을 강요하여, 이후 전면전을 통해 한반도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의 제4세대 전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한국 정부·국민·군대가 삼위일체가 되어 확고한 안보의지를 유지하고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강구하여, 힘의 전환이 발생하여 북한에 의한 전면전 발생을 억제·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국민·군대가 삼위일체로 형성된 전쟁수행 의지이자 수단인 우리의 향토예비군제도를 재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토예비군제도는 지난 1968년 창설된 이래, 국가의 경제발전과 군사역제력발휘의 의지이자 수단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여 왔다. 이제는 육군의 부대개편 계획, 인구의 도시지역 집중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등의 변화요인은 고려하여, 통합방위사태가 발령된 상황에서 향방동원을 시행하고, 향토예비군조직을 시·군·구 행정조직과 연결하여 표준화 시키며, 예비군훈련 보상비의 현실화와 편성장비의 현대화 등을 보완해야 한다. 향토예비군제도의 이러한 보완을 통해 북한의 제4세대 전쟁의 도발가능성을 억제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태현, “혁명전쟁의 이론적 고찰과 현재적 함의,” 동아연구, 제31권 1호, 2012, pp. 7-30, 241-244.
- [2] 김태현, “김일성의 한국전쟁 전략: 대남 공산혁명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pp. 66.
- [3]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 정신전력 연구, 제43호, 2012, pp. 13.
- [4] W. S. Lind, “Understanding Fourth Generation War”, Military Review, September-October-2004, pp. 13.
- [5] 토마스 햄즈, 최종철 역, ‘21세기 제4세대 전쟁’,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p. 4, 40-53, 57, 78, 260-263, 267-269, 315-320.
- [6] 해리 서머스, 문평식 역, ‘미국의 월남전 전략’, 병학사, 1983, p. 59.

6)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입소하여 받는 보상비로, 미국에서는 직책에 상응한 현역 계급 보수를, 이스라엘은 1일별로 8~10만원 수준을 책정하여 국방의무에 따른 생업포기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있음.

- [7] 황성철, '북한의 한국진 전략: 무엇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가', 북코리아, 2008, p. 166.
- [8] 국방부, '2014 국방백서', 국방부, 2014, p. 239, 251-255.
- [9] J. S. Pustay, 'Counterinsurgency Warfare', The Free Press, 1965, p. 24, 44-51.
- [10] W. S. Lind, 'The Changing Face of War', Marine Corps Gszette, 1989, pp. 22-26.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저 자 소개]



김 연 준 (Kim Yeon Jun)

1983년 3월 문학사
1996년 11월 국방관리전공 석사
2012년 8월 경호학 박사
현재,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kyj23509@naver.com